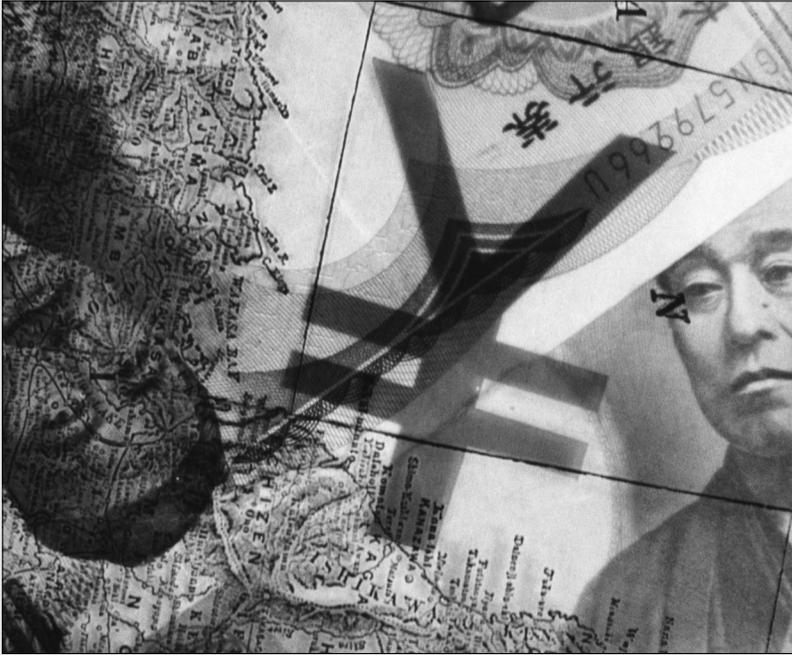


4/ 장기불황, 구조개혁, 생활보수주의

이정환



이정환(李政桓)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저술로는 「고이즈미 정권 하의 지역개발정책의 이중구조」, 「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 전환과 분열」, 「남성주의적 자기표현의 매력과 한계: 이시하라 신타로의 이단아적 정치리더십 연구」 등이 있다.

1. 서론

지난 20여 년간 일본은 현대 세계경제에서 유례없는 장기불황의 경험을 겪어 왔다. 일반적으로 장기불황이 지속되는 구조적 환경이 소득저하라는 삶의 고난 요소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일본사회가 보다 보수적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고 간주된다. 또한 이러한 삶의 고난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의해 도리어 더욱 강화되었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 장기불황을 전면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채 부의 불평등의 증가, 즉 격차사회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본사회에서 전후체제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었다는 관찰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기불황과 구조개혁에서 기인하는 전후체제에 대한 불만이 일본사회의 보수화로 연결된다는 논리는 지난 20년간 일본의 사회변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현상인 장기불황과 보수화를 연결시켜 이해하는 타당한 관점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일본사회의 보수적 성향은 과연 무엇이며, 그러한 보수적 성향이 장기불황의 경제적 요소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일본사회의 최근의 보수적 성향은 대결주의적 대외관으로 정의되고, 그러한 대결주의적 대외관이 일본사회 내에서 흡인력을 확보하는 구조적 원인으로서 장기불황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내적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두되었다는 일본현대사에 대한 해석과 같은 논리 구조에서 있다. 하지만 대결주의적 대외관이 최근 일본사회의 보수적 성향을 아우르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결주의적 대외관을 지니는 정치인과 단체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해서 대결주의적 대외관이 일본사회 전체에 폭넓고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기의 시대에 외향적 성향이 아닌 내향적 성격이 강화되곤 한다. 다수의 내향적 성향은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관심사 이외의 거대 이슈에 대해 무관심 또는 방기의 자세로 나타나게 된다.

이 논문은 일본사회 보수화의 핵심적 성격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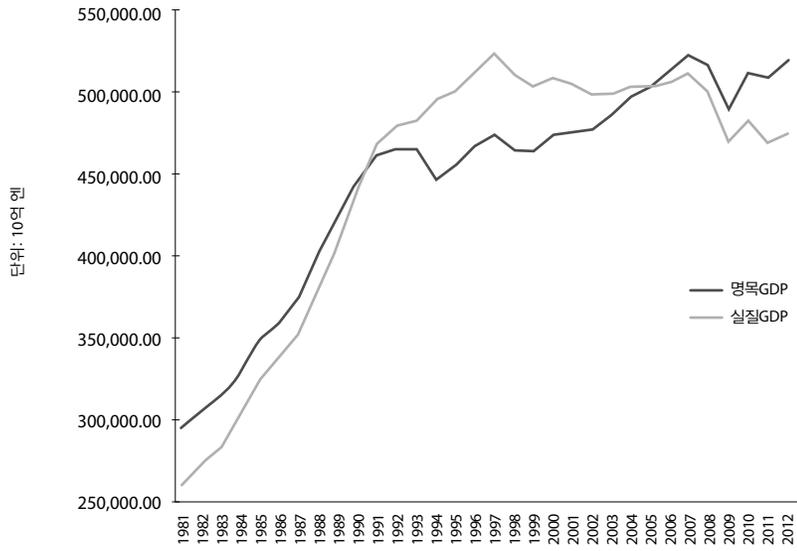
심사에만 주목하고 거시적 이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생활보수주의로 정의하고, 그 생활보수주의가 장기불황과 구조개혁의 사회변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생활보수주의의 용어는 1970년대 자민당에 대해 지지가 유지되는 유권자의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등장했으나, 학문적으로 폭넓게 사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관점에 입각해서 국가에 의해 매개되는 시장의 확장에 대한 사회의 자기보호¹의 한 패턴으로서 생활보수주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생활보수주의가 장기불황, 구조개혁에 의해서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밝히는 한편, 생활보수주의의 정치적 성격이 가져오는 일본 정치의 안정성 저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사회 보수화에 대한 획일적 이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2. 장기불황, 구조개혁, 격차사회

1991년 거품경제의 절정을 맞이한 일본 경제가 1993년 이후로 20여 년의 장기불황 하에 놓여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림 1>에서 보듯 일본의 명목GDP와 실질GDP 모두 2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디플레이션은 지난 20여 년간의 일본 장기불황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림 2>의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감률에서 보듯, 1990년대 이후, 특히 1998년 이후의 일본 경제는 심각한 물가하락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모든 경우에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로 디플레이션의 핵심 현상인 물가하락은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변수로 여겨진다. 소비자들에게 물가하락은 명목소득이 유지되는 한 소비 여력의 증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² 오히려 소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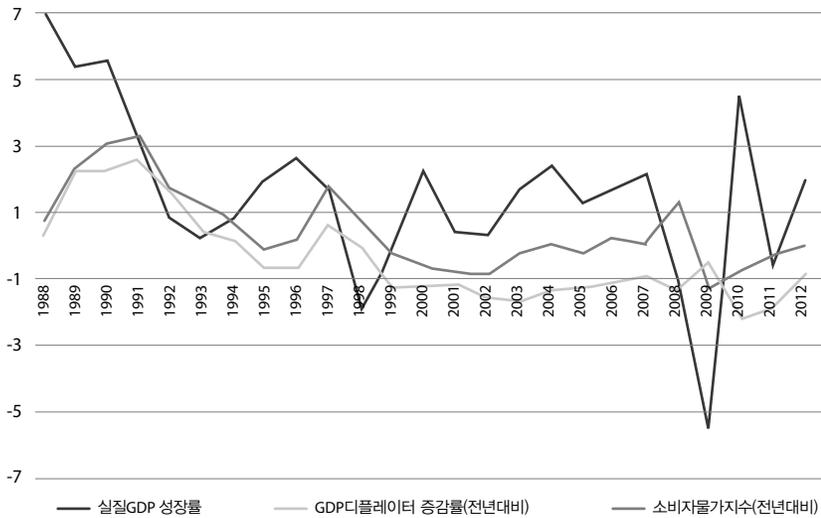
1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MA: Beacon Press, 2001.

2 吉川洋, 『デフレーションー』,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3, 7~8쪽.



출처: 일본 内閣府 國民經濟計算 통계자료(<http://www.esri.cao.go.jp/jp/sna/menu.html>).

〈그림 1〉 일본의 명목GDP와 실질GDP 추이(1981~2012)



출처: 일본 内閣府 國民經濟計算 통계자료(<http://www.esri.cao.go.jp/jp/sna/menu.html>),
世界經濟のネタ帳(<http://ecodb.net/country/JP/>).

〈그림 2〉 실질GDP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감률(전년대비, 1988~2012)

가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요소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대 거시경제학은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면에 집중해 발전해 왔다. 1970년대 이래로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직면했던 서구 선진국들의 예에 대응해서, 현대 거시경제학은 금리 정책을 통한 통화조절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왔다.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무엇인가는 현대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과제로서의 측면이 크다.³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언제나 반드시 삶의 질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물가하락이 지난 20년간 일본에서 어떻게 일본인들의 삶에 고난을 야기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동했는가 하는 점을 주목한다.

일본의 경제불황은 1993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20년 내내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3년에 시작된 경기 감속은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의 엔고에 맞물려 지속되었다. 하지만 1996년 엔고가 잦아들면서 물가하락의 경향이 완화되었고, 이에 부응해서 일본의 실질성장률이 2.6%로 높아졌다. 1996년경에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1990년대 중반에는 경기 감속을 1980년대 후반 거품경제의 조정으로 여기면서 경기순환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강했다. 1996년경에는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불황과 물가하락이 멈추고 다시 경기가 살아날 것에 대한 광범위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1997년 소비세율의 3%에서 5%로의 인상, 대형 금융기관의 도산,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본 경제는 1998년 다시 불황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그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불황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매체에서 디플레이션이 언급되는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었다. 하지만 엄격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2003년을 기점으로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불량채권 처리의 진척, 세계경제 호황, 엔저 현상, 원유 등 소재가격의 상승

3 Richard Koo, *The Holy Grail of Macroeconomics: Lessons from Japan's Great Recession*, Singapore: Wiley,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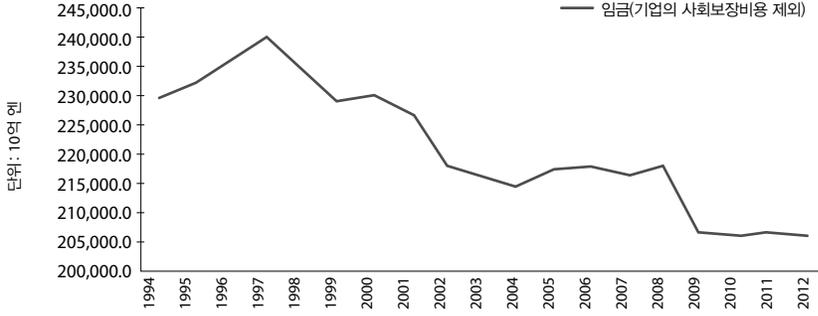
등의 요소 속에 거시적 지표에서 물가하락의 요인은 줄어들면서 2006년에는 1997년 이후 최초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기업 물가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게 된다. 2000년대 중반에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급속도의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탈디플레이션의 상황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금방 끝나고 말았다. 세계 금융위기는 2000년대 중반 세계경제 호황에 기대어 성장했던 일본 기업들에게 과잉공급의 상황을 만들었고, 그 결과 2009년 일본은 전후 최악의 마이너스 5.5%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플레이션은 다시 일본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고, 민주당 정권과 자민당의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모두 탈디플레이션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잡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은 1993~1995년, 1998~2002년, 2009년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고, 각각의 디플레이션 상황의 핵심 요소는 거품경제의 조정, 불량채권 처리,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차별화될 수 있다.⁴

하지만 시기적으로 차별적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지난 20년간의 경제 불황이 일본인들의 삶의 질 악화를 가져오는 구조의 핵심은 물가하락 자체가 아닌 물가하락 속에서 벌어진 실질소득의 지속적 하락과 자산가치의 하락이다. 일본 노동자들의 명목임금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그림 3>에서 보듯 실질임금의 하락은 1998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⁵ 이론적으로 불황이 언제나 임금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탄력적 노동시장에서는 임금하락이 아닌 고용축소가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노동시장은 (물론 대기업 위주로) 고용과 해고에 유연한 시스템이 아닌 장기고용의 패턴 속에서 발전해 왔다. 일본의 고용시스템은 고용의 유연성이 적은 반면에 임금의 유연성이 높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수당과 보너스로 지급되는 임금구조 속에서 불황기 일본의 노사는 고용의 축소 대신 수당과 보너스의 축소를 선택하는 패턴을 보였다.⁶ 후술하

4 지난 20여 년의 일본 경제의 거시적 분석에 대해서는 吉川洋, 『デフレーションー』,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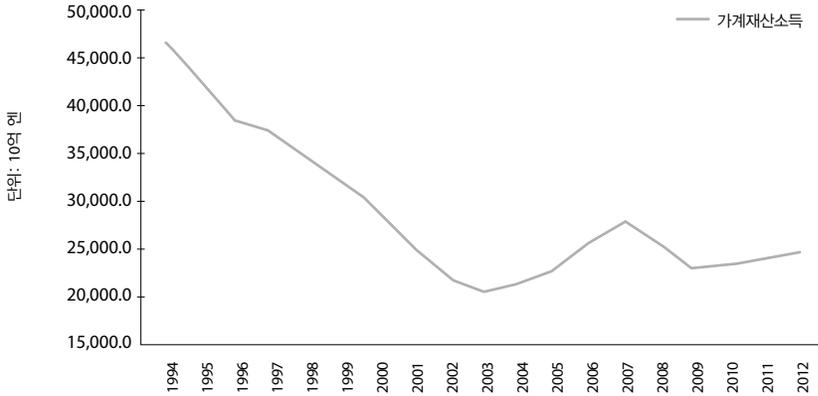
5 吉川洋, 『デフレーションー』, 175쪽.

6 八代尚宏, 『労働市場改革の経済學』, 東洋經濟新報社, 2009, 138~153쪽.



출처: 일본 内閣府 國民經濟計算 통계자료(<http://www.esri.cao.go.jp/sna/menu.html>).

〈그림 3〉 실질임금 총액의 추이, 1994~2012년



출처: 일본 内閣府 國民經濟計算 통계자료(<http://www.esri.cao.go.jp/sna/menu.html>).

〈그림 4〉 가계 재산소득의 추이, 1994~2012년

듯 구조개혁을 통한 계약직과 파견노동이 증가하는 고용 패턴의 변화도 불황 속 일본인들의 삶의 질 악화에 영향을 준 요소이지만, 임금하락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예외 없는 현상이었다. 한편 장기불황기의 자산가치의 하락은 거품경제 동안 과잉투자를 했던 기업들과 이에 막대한 양의 대출을 해 준 일본 금융기관들에 장기적 혼란을 준 요소다. 하지만 자산가치 하락의 영향은 일본 지역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엄청난 경제

적 타격을 제공했다.⁷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은 매출의 감소와 함께 주로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부의 감소를 즉각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가계의 재산소득의 하락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의 삶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소득하락은 구조개혁을 통해 강화되었다.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2000년대 초반 일본 정부의 선택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었다. 불량채권 처리를 위한 금융재생 프로그램과 더불어 기업 활동에 호의적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다방면의 규제를 완화하는 구조개혁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다.⁸ 우선 고용제도 면에서 계약직과 파견노동의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진전되었다.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의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48%로 스위스의 96%, 독일의 74% 등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¹⁰ 비정규직화를 통한 소득하락은 산업별 임금 추이의 변화와 연결되어 그 영향이 증폭되었다. 2000년대 일본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고용의 감소와 서비스 분야의 고용 증가를 보여왔다. 서비스 분야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비중이 높으면서 의료, 복지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증가하는 고용의 전반적 임금 수준이 대폭 하락했다. 2002~2010년 사이 일본의 의료, 복지 분야에서의 고용은 38% 증가했지만, 임금은 13% 감소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같은 시기에 20%의 고용이 증가한 미국의 헬스케어, 교육 연관 산업에서 임금이 32% 증가했던 것과 대비된다.¹¹ 이러한 예는 구조개혁이 신사업 분야의 혁신창출을 통한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노동비용 삭감의 결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은 지역 재분배기제의 근간

7 吉川洋, 『轉換期の日本經濟』, 岩波書店, 1999, 134~139쪽.

8 渡辺治 外, 『新自由主義か 新福祉國家か 民主党政權下の日本の行方』, 1장, 旬報社, 2009.

9 고용제도 측면에서의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八代尚宏, 『労働市場改革の經濟學』를 참고.

10 吉川洋, 『デフレーション』, 190쪽.

11 吉川洋, 『デフレーション』, 191쪽.

도 혼들어 놓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악화시켰다. 공공사업의 축소, 삼위일체 개혁을 통한 지방재원의 축소, 우정개혁을 통한 공공사업 예산의 조달 메커니즘의 단절 등은 고이즈미 정권이 지역 재분배기제를 뒤흔들기 위한 구조개혁의 결과들이었다.¹² 구조개혁을 통한 지역 재분배기제의 혼란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악화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양상은 전후체제 생활보장체계의 삼중구조인 국가에 의한 (산업정책과 공공사업을 통한) 기업과 지역의 보호, 기업과 지역에 의한 피고용인과 자영업자의 보호, 피고용인과 자영업자들의 주를 이루는 남성 가장에 의한 가족 구성원 보호의 체계¹³가 장기불황과 구조개혁으로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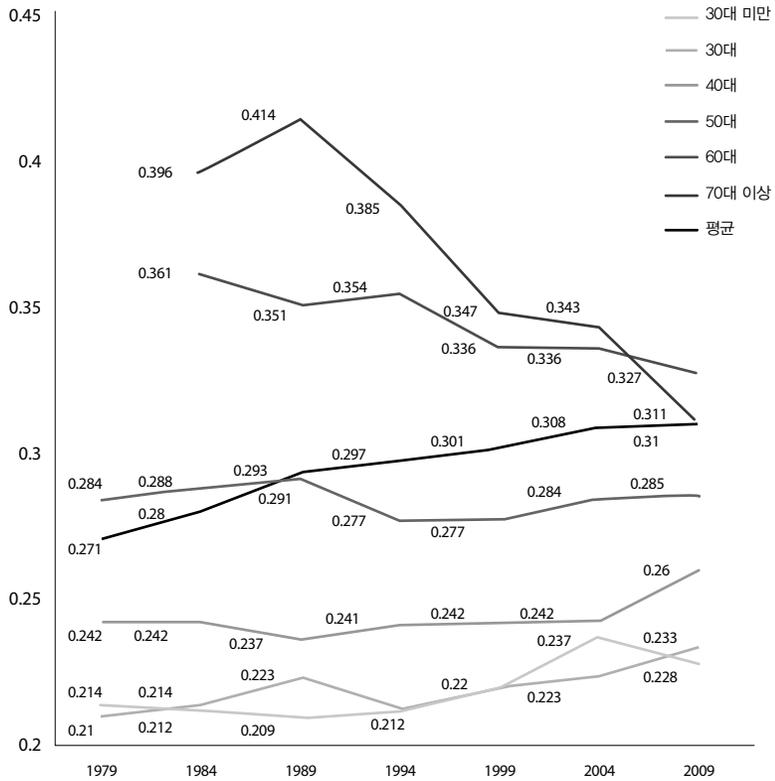
장기불황 속에 등장한 소득하락으로 인한 삶의 질 악화가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악화되면서 일본사회의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불만은 2000년대 중반 폭넓게 인식된 격차사회론으로 대변된다.¹⁴ 구조개혁이 부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이 상황 속에서 삶의 질이 나빠졌다는 인식이 크게 대두되면서 경기호전의 상황을 보이던 2000년대 중반 오히려 자민당 정권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게 된다. 격차사회론은 부의 불평등에 대한 지니계수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서 그 정당성을 찾고 있다. 지니계수의 증가와 구조개혁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구조개혁론자들과 이에 대한 비판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¹⁵ 하지만 구조개혁과 격차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반론적 논쟁보

12 渡辺治 外, 『新自由主義か 新福祉國家か 民主党政權下の日本の行方』, 3장.

13 전후 일본의 생활보호체계의 삼중구조에 대해서는 宮本太郎, 『福祉政治—日本の生活保障とデモクラシー』, 有斐閣, 2008.

14 橋木俊詔, 『格差社會—何か問題なのか』, 岩波書店, 2006.

15 구조개혁으로 인한 격차 증가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반구조개혁론자들의 논지는 橋木俊詔, 『格差社會—何か問題なのか』; 山家悠紀夫, 『痛みはもうたくさんだ!—「構造改革」宣言』, かもがわ出版, 2007; 白川眞澄, 『格差社會を撃つ—ネオ・リベにさよならを』, インパクト出版會, 2008 등을 참고. 반대로 구조개혁론자들은 구조개혁과 격차 증가의 직접적 상관관계에 부정적이다. 그들의 논지는 竹中平蔵, 『ニッポン再起動 こうすれば日本はよくなる!』, PHP研究所, 2013; 八代尚宏, 『新自由主義の復権—日本經濟はなぜ停滞しているのか』, 中央公論新社, 2011; 鈴木眞實哉, 『格差社會で日本は勝つ—「社會主義の呪縛」を解く』, 幸福の科學出版, 2007 등을 참고.



출처: 總務省 平成21年全國消費實態調査(<http://www.stat.go.jp/data/zensho/2009/>).

〈그림 5〉 세대주 연령별 지니계수의 추이, 1979~2009년

다 주목할 점은 부의 불평등 경향의 세대별 차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격차는 고령 세대의 경우에 보다 높고, 청년 세대의 경우에 낮은 경향이 있다. 생애 주기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장년 세대에서는 소득격차가 크지만, 경제활동에 진입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청년 세대의 경우 직업과 직장 간의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림 5〉의 일본의 지니계수의 세대별 추이에서 주목할 점은 50대 이상의 지니계수가 2000년대 들어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20~40대의 지니계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평균적 지니계수의 증가폭이 구조개혁에 의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하더라도, 20~40대 지니계수의 증가가 구조개혁 속의 비정규직화의 증가와 연결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격차사회론의 핵심은 이러한 수치적 통계가 아닌 심리적 반응에 있다. 고용격차, 지역격차, 교육격차, 복지격차 등 용어의 폭넓은 사용에서 보듯,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일본인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격차사회론으로 결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격차사회론이 일본사회에서 폭넓게 수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격차사회론의 배경에 주목하면 고단한 삶에 대한 일본사회의 부정적 심리가 포착된다.¹⁶

3. 일본사회의 세 가지 대응 패턴

장기불황과 구조개혁의 사회적 결과에 대해 일본사회는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는 부정적 시선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2000년대 중반의 세계경제 호황에 기댄 경기호전과 구조개혁의 규제완화 속의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의 표출¹⁷도 있었지만, 그러한 관점은 일본사회의 주류적 반응이 아니었다. 삶의 질 악화에 대한 부정적 심리구조가 사회 저변에 자리 잡은 가운데 이에 대한 일본사회의 대응은 다양한 양상으로 진전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사회의 장기불황과 구조개혁의 결과에 대한 다양한 대응은 공통되게 시장에 대한 사회의 자기보호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플라니는 시장 대 국가의 대립축이 아닌, 시장 대 사회의 대립축 속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해했다. 시장의 발전이 전통적 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 사회가 기존 공동체 유지를 위한 다양한 보호 활동을 통해 시장 확대에 대항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진전되어 왔다는 것이다.¹⁸ 서구 유럽에서 자본주의 초기 사회의 자기보호는 구호 활동, 종교 활동, 러다이 트(Luddite)운동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시장과 사회의 대항 관계에

16 鎌田慧, 『痛憤の現場を歩く』, 金曜日, 2005.

17 大前研一, 『「知の衰退」からいかに脱出するか?: そうだ!僕はユニークな生き方をしよう!!』, 3장, 光文社, 2011.

18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ch. 10.

서 국가는 양면적 모습을 보인다. 시장 확대를 지지하는 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사회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사회의 자기보호의 움직임을 국가 정책 내로 받아내는 모습도 보인다. 광의적으로 볼 때, 서구 복지국가체제의 확립도 사회의 자기보호 메커니즘이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시장 확대에 대한 사회의 자기보호의 메커니즘은 1960~1970년대의 환경운동, 혁신지자체운동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사회의 자기보호가 항상 진보적 성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익유도 정치의 지역 재분배기제의 창출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의 자기보호의 메커니즘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사회의 자기보호는 언제나 존재하며, 그 성향은 진보적이기도 하고 보수적이기도 하다.

장기불황과 구조개혁의 상황은 사회의 삶의 질을 저하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의 대응을 야기했다. 이 논문은 앨버트 허시먼(Albert O. Hirschman)의 이탈, 발언, 충성(exit, voice, and loyalty)의 논리구조에서 힌트를 얻어 일본사회의 장기불황과 구조개혁에 대한 대응 양상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허시먼은 사회의 어떠한 조직이든 곤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구성원들은 이탈, 발언, 충성의 세 가지 대응을 보인다고 주장했다.¹⁹ 이러한 세 가지 대응을 변용하면 장기불황과 구조개혁에 대한 일본사회의 세 가지 대응 패턴이 드러난다. 우선 체제에서 벗어나는 이탈의 패턴은 이민과 같은 방법이 아닌, 사회에서 기능하는 자신의 삶 또는 미래의 포기의 선택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두 번째로 자기보호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발언의 패턴은 반구조개혁의 사회운동과 함께 외부의 적 또는 내부의 이질적 존재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목소리를 내는 우파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보호의 충성의 패턴은 전후체제 자체에 대한 충성이 아닌 자신의 삶의 공간인 공동체의 안정적 존속을 위한 내향적 자세로 나타난다. 당연히 발언의 패턴과 충성의 패턴에는 당연히 혁신적 성향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19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보수적 성향의 발언의 패턴과 충성의 패턴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

1) 포기의 패턴

체제로부터 이탈하는 패턴도 일종의 자기보호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장기불황과 구조개혁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대응 양식이다. 가장 일반적인 이탈의 패턴은 이민이겠지만, 일본사회에서 이민의 선택지는 이탈 패턴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사회에서 이탈 패턴의 양상은 체제 내에서의 자기 역할의 기능 포기로 드러난다.

가장 극단적인 포기의 선택지는 자살이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자살률을 보여왔지만, 자살자의 수가 1998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6년 이후 매년 2만 5000명 내외로 유지되던 자살자 수가 1998년 3만 2863명으로 급증하였고, 2003년 3만 4427명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후에도 매년 3만 명 이상의 자살이 발생하고 있다. 자살의 증가에서 두드러진 점은 여성 자살자 수가 매년 9000여 명으로 변화가 적은 반면에, 남성 자살자 수가 1998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²⁰ 경제 상황과 자살자 수와의 상관성은 거품경제의 호황기에 자살자 수가 감소했던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또 다른 포기의 선택지는 체제로 편입되는 길인 취업과 결혼의 포기다. 패러사이트 싱글(パラサイト・シングル)은 이러한 취업과 결혼 포기의 패턴을 상징하고 있다.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에 의해 조어된 패러사이트 싱글은 학교 졸업 후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부모에 의지하며 취업과 결혼에 무관심한 이들을 일컫는다.²¹ 대학 졸업 후 신규 채용에서 기회를 잃으면 취업하기 곤란한 일본의 고용 시스템이 패러사이트 싱글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취업에 성공했어도 결혼을 포기하는 패턴은 보다 일반적이다. 1980년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2000년대 중반의 혼인율과

20 吉川洋, 『デフレーションー』, 179쪽.

21 山田昌弘, 『パラサイト・シングルの時代』, 筑摩書房, 1999.

결혼에 대한 의사 모두 크게 하락했다.²²

한편 여성의 전업주부에 대한 지향성의 증가는 여성의 취업으로의 체제 편입에 대한 포기의 패턴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7년 내각부 조사에서 부부 간의 일과 가사의 업무 분담에 대한 세대별 여론조사에서 20, 30대 여성의 전업주부에 대한 지지도가 40, 50대 여성의 지지도보다 높게 나왔다.²³ 이는 젊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에의 포기 성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불황 속에서 정규직 취직에 대한 기대감이 적고, 구조개혁을 통해 증가한 비정규직 취업의 확률이 높은 여성들이 취업에 대한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포기의 패턴은 체제 밖으로 이탈이 아닌 체제 안에서 자신이 기 능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고 확보하려는 노력의 중단으로 볼 수 있다. 포기의 패턴은 가장 극단적인 자기보호의 선택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들은 일본의 고령화, 소자화의 인구변동 속에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 차별과 배제의 패턴

극단적인 자기보호의 선택인 포기의 패턴과 달리 발언의 패턴은 가장 적극적인 자기보호의 방법이다. 적극적 발언의 패턴은 탈구조개혁의 사회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체제불만의 목소리는 항상 불만의 원인 자체로만 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체제 밖의 적과 체제 내의 이질적 존재에 대한 배제의 목소리가 일본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다. 극소수의 직접적 참여 속에 우익운동이 유지되는 속에서, 우익적 성향의 출판시장의 성장은 차별과 배제의 방법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층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지적 유희 차원의 문화 소비에 머물러 있던 차별과 배제의 패턴은 최근 재특회(在日特權を許さない市民の會) 등의 증오연설(hate

22 山田昌弘, 『なぜ若者は保守化するのか—反轉する現實と願望』, 東洋經濟新報社, 2009, 10~19쪽.

23 山田昌弘, 『なぜ若者は保守化するのか』, 70~72쪽.

speech)에서 볼 수 있듯 보다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우익사회 운동은 전후 초기의 길거리 우파로서의 순정우익에서 1960~70년대 신우익의 전후체제 탈각의 움직임으로 이행했다.²⁴ 1970년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할복자살 이후 신우익운동은 그 선명성을 강화했지만,²⁵ 우익 사회운동의 지면은 넓지 못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과거 우익 사회운동이 내세우던 동아시아 주변국가에 대한 멸시, 재일한국인 등 일본 내 이질적 존재에 대한 힐난의 발언은 보수 저널리즘의 발전 속에 더욱 많이 소비되게 되었다.²⁶ 1990년대 이전부터 존재하던 『문예춘추』(文藝春秋), 『쇼쿤!』(諸君), 『세이론』(正論), 『보이스』(Voice) 등의 보수적 색채의 잡지에 더불어, 1900년 전후로 『사피오』(SAPIO), 『바트』(Bart) 등이 창간되면서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발언이 보다 폭넓게 통용되었다. 차별과 배제의 발언을 하는 보수 저널리즘을 소비하는 일본사회의 심리는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와 내부의 이질적 존재에게로 돌리면서 얻는 현실 회피적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와 같은 이단아적 정치지도자들의 차별주의적 발언들이 일본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²⁷

차별과 배제의 발언이 소비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회운동화하는 움직임은 최근 재특회의 움직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가 지적하듯 재특회 활동에 참여하는 일본인들의 심리구조의 바탕에는 일종의 피해의식이 존재한다.²⁸ 그들이 느끼는 피해가 재일한국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온갖 불만과 불안을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발언으로 집중시켜 폭발시키

24 김채수, 『일본우익의 활동과 사상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25 鈴木邦男, 『新右翼—民族派の歴史と現在』, 彩流社, 1988.

26 강기철, 「〈만화협찬류〉의 상업적 전략과 보수 저널리즘의 확대」, 『일본어문학』 56집, 2012, 289~307쪽.

27 이정환, 「남성주의적 자기표현의 카타르시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의 이단아적 리더십의 성격」, 『국제지역연구』 21권 4호, 2012, 61~92쪽.

28 야스다 고이치, 김현욱 역, 『거리로 나온 넷우익: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보수가 되었는가』, 서울: 후마니타스, 2013.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내향적 자기보호의 패턴

하지만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패턴이 일본사회의 장기불황과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의 자기보호의 주류적 패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주류적 패턴은 자기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일본에서 자기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는 노력은 체제에 대한 충성과는 거리가 멀다. 자기의 삶과 공동체에 위기를 야기한 체제에 대한 불만 속에서 체제 개혁의 움직임에 대한 찬성의 정치 선택이 가능하다. 즉,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성을 가져왔지만 여러 가지 기능부전의 상황에 놓인 거시적 전후체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전후체제 속에서 발전한 미시적 삶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최근 일본의 사회의 자기보호의 가장 주류적 패턴이다.

공동체 또는 커뮤니티에 대한 강조가 이러한 내향적 자기보호 패턴을 대변한다. 일본사회에서 지역공동체의 적극적 역할은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²⁹ 하지만 1990년대 NPO(non-profit organization) 붐 이후 지역공동체의 정책 과정 참여에 대한 이념적 지향을 넘어서는 폭넓은 동의와 함께 커뮤니티 역할론이 보다 강력하게 대두되었다.³⁰ 공동체를 위한 참여 활동을 통해 장기불황과 구조개혁의 부정적 사회적 여파로부터 지역공동체를 지켜낸다는 논리는 시민사회론자와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의 지식인들과 사회운동가들에게도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 지키기는 전통적 사회기반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보수적 지식인들에게도 수용되었다. 그들이 그리던 공동체의 이미지는 서로 상이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구성원의 사회참여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³¹

29 Sheldon M. Garon, *Molding Japanese Minds: The State in Everyday Lif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30 伊豫谷 外, 『コミュニティを再考する』, 平凡社, 2013, 17~21쪽.

31 시민사회론자의 공동체 역할 강조론은 伊佐淳, 『NPOを考える』, 創成社, 2008; 岡田知弘, 『一人ひとりが輝く地域再生』, 新日本出版社, 2009; 松田昇, 『市民學の挑戦』, 梓出版社, 2008 등을 참조. 보수적

이러한 공동체로의 내향적 자기보호의 패턴은 그 움직임이 공동체 단위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국가적 단위에서 시장의 역할, 재분배기제의 재조정 에 대한 목소리로 승화되지 못하고, 장기불황과 구조개혁의 부정적 결과가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것을 막아내는 소극적이고 지역경계에 국한된 자기보호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³²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내향적 자기보호의 패턴은 개혁적 성격보다는 현실안주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내향적 자기보호의 패턴이 생활보수주의의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대응 패턴은 상호 간의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포기, 차별과 배제의 발언, 내향적 자기보호의 선택지는 한 개인에게 모두 해당되는 선택지일 수 있다. 혹은 포기의 선택에서 차별과 배제의 발언의 선택으로 이행하기도 한다. 다수의 재특회 참가인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차별과 배제의 발언의 선택과 내향적 자기보호의 선택은 상호 간에 이행이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소극적 선택으로서의 내향적 자기보호의 패턴은 때론 적극적 선택으로서의 차별과 배제의 발언의 선택을 제어하지 않고 방기함으로써 차별과 배제의 목소리가 강화되는 근간이 되기도 한다.

4. 생활보수주의의 성격

장기불황과 구조개혁에 대한 일본사회의 주류적 대응인 내향적 자기보호의 패턴은 현실의 불만과 불안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 속에서 현실안주적 성향의 생활보수주의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보수

인 공동체 역할 강조론은 西部邁, 『保守の辭典』, 幻戯書房, 2013; 中野剛志, 『成長なき時代の「國家」を構想する—經濟政策のオルタナティブ・ヴィジョン—』, ナカニシヤ出版, 2010 등을 참조.

32 Akihiro Ogawa, *The Failure of Civil Society?: The Third Sector and the State in Contemporary Japa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9.

주의가 장기불황과 구조개혁 속에서 새롭게 등장했다고 볼 수 없다. 1970년대 이래로 일본에서 작동된다고 관찰되어 온 생활보수주의가 재정비되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자신들의 삶의 이득을 위한 보수정권에 의 지지 유지에 대한 설명 개념으로 등장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생활보수주의는 가치관 차원에서 폐쇄적 성향의 공공성 인식이라는 특징과 정치적 영향 차원에서 정치이슈의 미시화와 거시적 정치이슈에 대한 정서주의적 태도의 특징을 지닌다.

가치관 차원에서 생활보수주의의 폐쇄적 성향의 공공성 인식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공동체 내부의 사이좋음(仲良し)에 대한 과도한 긍정에서 유래한다. 한편 생활보수주의의 정치적 영향 차원에서의 특징은 미시적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서는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정치이슈에 대한 정서주의적 성향이다. 생활보수주의에서 정치의 장(場)에 대한 인식이 지역, 조직, 섹터, 직장 등의 ‘우리’들의 이익에 대한 것으로 좁혀져 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선택에서 이념 지향이나 정책 방향성에 의한 선택보다 정서에 입각해 정치 공급자들에 대한 지지와 외면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1) 공동체 중심의 닫힌 공공성

생활보수주의의 첫 번째 특징은 공동체 내부의 사이좋음에 대한 지나친 긍정에서 나오는 폐쇄적 성향의 공공성 인식이다. 생활보수주의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공공성의 핵심적 장(場)이다. 공동체 내의 자발적 참여가 개인적 수준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공적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공동체 내부의 다이너미즘에 대한 지나친 긍정적 인식은 공공성의 무대를 공간을 넘어서는 보편적 성격으로 창출하는 데 곤란한 요소로 작동한다. 다케이 다카히토(竹井隆人)가 지적하고 있듯이, 공동체 내부로의 지나친 강조가 그 공동체의 폐쇄적 성격을 낳고 이 폐쇄적 성격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성은 열린 성격이 아닌 닫힌 성격을 지닌다.³³ 차별과 배제의 논리구조가 아님에도 지나친 내부지향성이 일종의 폭력적 성격을 지닐 수 있

는 상황이 생활보수주의의 공동체 중시의 성격에서 나타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일본 정부는 공동체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정책 과정에 끌어들이고자 노력했다. 지역공동체에서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를 제도화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의 메커니즘을 창출하고자 노력했으며, 다소 부정적 뉘앙스의 관민협동이라는 기존의 용어 대신에 ‘Public-Private Partnership’(PPP)이란 영어를 사용해서 시민사회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³⁴ 최근 민주당 정권이 제시했던 ‘새로운 공공’(新しい公共)의 슬로건이 이러한 공동체 참여의 정책 과정으로의 제도화를 상징하고 있다.³⁵ 이러한 흐름은 공동체 내부의 다이너미즘을 강조하는 생활보수주의를 동원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이러한 동원된 공동체 참여에 자발적 다이너미즘의 요소가 건강하게 유지될는지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³⁶

2) 정치이슈의 미시화와 거시적 이슈에 대한 정서주의적 대응

공동체 내부 다이너미즘에 대한 강한 인식은 생활보수주의의 두 번째 특징인 정치쟁점의 미시화와 연결된다. 물론 미시적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은 장기불황과 구조개혁의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성격은 아니다. 긍정적 의미에서든 부정적 의미에서든 미시적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전후 일본 정치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주로 지역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사로 대표되는 정치이슈의 미시화는 1960년대의 지역적 환경오염과 도시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혁신지자체 운동에서도 발견된다.³⁷ 하지만 미시적 이슈를 중심으로

33 竹井隆人, 『デモクラシーを(まちづくり)から始めよう: シャッター通りから原發までを哲學する』, 平凡社, 2013, 121~124쪽.

34 이정환, 「고이즈미 정권 하의 지역개발정책의 이중구조: 시장개혁과 공동체참여의 지역적 불균형」, 『한국정치학회보』 45집 1호, 2011, 187~209쪽.

35 奥野信宏, 『新しい公共を担う人びと』, 岩波書店, 2010.

36 일본사회 공동체 참여론의 내향적 성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竹井隆人, 『デモクラシーを(まちづくり)から始めよう』; 中野敏男, 『大塚久雄と丸山眞男 動員, 主体, 戦争責任』, 青土社, 2001; 田中理恵子, 『平成幸福論 ノート変容する社會と「安定志向の異」』, 光文社, 2011; Akihiro Ogawa, *The Failure of Civil Society?*를 참고.

37 廣川禎秀 外, 『戦後社會運動史論 2(高度成長期を中心に)』, 大月書店, 2013.

정치가 작동해 온 핵심적 메커니즘은 전후 일본 정치경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할거주의적 이익유도 정치라고 볼 수 있다.³⁸ 재분배기제를 개인 수준의 복지 제공으로 구축하지 않고 산업 섹터 간의, 그리고 지역 간의 재분배로 구축해 온 전후 일본 정치경제체제가 일본사회가 미시적 이슈에 보다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했다. 즉, 정치이슈의 미시화는 전후 일본 정치경제체제의 제도적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미시적 이슈는 일본인들의 정치적 선택에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들어 이시하라 신타로가 도쿄 도지사로서 높은 인기를 누렸던 배경에는 그의 배타주의적 대외관에 대한 도쿄 도민의 수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젤자동차 규제, 외형 표준과세의 신설, 요코다 미군기지 이전 시도 등의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이시하라의 정책이 도쿄 도민에게서 널리 수용되었기 때문이다.³⁹ 또한 2007년 참의원 선거와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오자와 이치로(小澤 一郎) 지도 아래의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생활이 제일’이라는 생활밀착형 슬로건이 있었다.⁴⁰ 고이즈미 구조개혁으로 기존의 이익유도 정치를 통한 이익이 줄어드는 지역주민에게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기치가 높은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다.

전후 일본 정치는 보수와 혁신의 상이한 이념 지향의 대립축 속에서 유지되어 왔었다. 보수가 혁신에 대한 지속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미시적 이익 제공의 정치경제 메커니즘인 이익유도 정치와 지역적 차원의 후원회 조직을 통한 대면접촉의 정치 세력화를 통해 미시적 이슈에 대한 선별주의적 해결책을 자민당 보수정권이 중앙집중적 국가기획을 통해서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⁴¹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으로 중앙정치와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고, 2000년

38 齊藤淳, 『自民党長期政権の政治経済學—利益誘導政治の自己矛盾』, 勁草書房, 2010.

39 淺野史郎·石原慎太郎研究グループ, 『石原慎太郎の東京發・日本改造計画』, 學陽書房, 2000.

40 小林良彰, 『政権交代—民主党政權とは何であったのか』, 中央公論新社, 2012.

41 山口二郎, 『ポスト戦後政治への對抗軸』, 서울: 岩波書店, 2007.

대 구조개혁으로 이익유도 정치의 메커니즘 또한 약화되었다.⁴²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사회의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대응은 보다 가변적이게 되었다. 가변적 정치적 선택의 특징은 기존 제도와 인물에 대한 엄중 속에 참신한 정치인물 또는 슬로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참신한 인물과 슬로건에 대한 지지는 그 인물과 슬로건의 정책지향성에 대한 지지의 성격보다는 참신성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다.⁴³ 이러한 정서주의적 기대심리에 의거한 정치적 선택은 일본 정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거시적 정치 선택에서의 정서주의적 성향의 강화는 1970년대 이래로 증가해 온 무당파층의 증가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무당파층의 가변적 정치적 선택이 대도시권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면,⁴⁴ 최근의 정서주의적 성향에 기댄 정치적 선택의 양상은 기존에 이익유도 정치 속에 자민당 지지를 유지해 오던 지방도시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7년과 2009년 선거에서의 민주당의 지방도시권에서의 압승은 정서주의적 성향의 강화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최근 일본 정치는 이념이나 정책보다 정국에 대한 정서주의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동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초반의 고이즈미와 최근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의 인기도 이해될 수 있다.⁴⁵

5.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생활보수주의

보수화는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보수적 패러다임이 사회 저변에 보다 폭넓게 수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수화의 성격은 보수적 정치 패러다임이 사

42 박철희,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4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43 大嶽秀夫, 『日本型ポピュリズム—政治への期待と幻滅』, 中央公論新社, 2003.

44 橋本晃和, 『無党派層の研究: 民意の主役』, 中央公論新社, 2004.

45 大嶽秀夫, 『小泉純一郎ポピュリズムの研究—その戦略と手法』, 東洋經濟新報社, 2006; 박명희, 「21세기의 사카모토 료마? 하시모토 도루의 정치기업가적 리더십」, 『담론 201』 15권 4호, 2012, 205~234쪽.

회의 보수적 감각과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보수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장기불황과 구조개혁 속에서 광범위하게 발전한 일본사회의 생활보수주의의 감각이 어떻게 일본의 보수적 정치 패러다임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는 공통되게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두 개의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보수적 패러다임이 존재해 왔다. 두 패러다임 모두 국가의 시장 개입과 사회보호의 역할을 인정해 온 수정자본주의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명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1980년대의 레이거니즘(Reaganism)과 대처리즘(Thatcherism) 이후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왔었다. 또한 신보수주의도 유럽의 극우정당들의 성장과 미국의 티파티운동(Tea Party movement)의 진전에서 보듯 선진국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⁴⁶

신자유주의의 정치 기획과 신보수주의의 정치 기획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회관, 국내정치관, 국제정치관에서 상이한 가치지향점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는 공공성이 그 자체를 추구하는 데서가 아니라 각자의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로 생각하면서 각 개인의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책임의 개인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에 입각해 수정자본주의의 복지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쟁의 시장원칙 하에 사회가 작동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경쟁의 시장원리는 국경 안팎의 구별 없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쟁의 시장원리가 갈등이 아닌 협력과 평화의 공공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세계관이다.⁴⁷

반면에 신보수주의는 개인이 아닌 집단적 존재로서의 전통적 단위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 국가 개입 반대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동일선상에 있지만, 그 반대의 이유가 세계화 속에서의 시장 확대에 대한 반

46 John Micklethwait, *The Right Nation: Conservative Power in America*, New York: Penguin Books, 2005.

47 八代尚宏, 『新自由主義の復権』, 3~5쪽.

대의 지향점과 이질적 존재에 대한 배타적 성격을 지니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차이점을 지닌다.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이 시장원리의 보편성에 입각해 있다면, 신보수주의는 역사적 맥락에서의 전통적 가치의 보호라는 특수성에 입각해 있다.⁴⁸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정치적으로 수정자본주의에 입각한 중도좌파 정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보수 정치 세력화의 필요성에 의해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곤 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정치 기획은 모두 전후체제의 개혁 또는 탈각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국가의 개입을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성의 유지 양 측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낳은 일본의 전후체제는 장기불황의 상황 속에서 그 유효성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의 신자유주의는 다른 선진국의 신자유주의 버전과 유사하다.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전후체제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 메커니즘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적 시장원리의 도입을 전후체제 개혁의 과제로 제시했다. 고이즈미의 구조개혁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실제 정치적 실험으로 실천된 사례다.⁴⁹

한편 일본에서 신보수주의는 전후 우익적 사고의 전통과 연결되고 있다. 일본에서 신보수주의가 주목하는 전후체제의 문제점은 일본의 전통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일본 국가의 국내적, 국제적 정책 방향성이다. 국내적으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담아내는 교육제도와 이질적 문화론에 대한 배려 정책 등을 일본의 전통적 가치 보수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간주한다.⁵⁰ 이러한 전통적 가치가 제대로 보수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 국체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자기결정의 권리를 전후헌법을 통해 스스로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보수주의는 파악한다. 이러한 근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힘의 행사를 복권하는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일본 국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48 西部邁, 『保守の辭典』, 20~26쪽.

49 渡辺治, 『安倍政權論—新自由主義から新保守主義へ』, 旬報社, 2007, 30~45쪽.

50 渡辺治, 『安倍政權論』, 92~99쪽.

관점을 유지한다.⁵¹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전전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복고적 향수의 감각을 덧붙여, 일본의 신보수주의는 근린국에 대한 대결주의적 대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신보수주의에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열망과 대결주의적 대외관의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두 가지 정치 기획은 대결적 관계 속에 진전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두 정치 기획은 역설적이게도 전후체제의 핵심적 주체였던 자민당 안팎에서 공존하면서 상보적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시장을 위한 규제완화와 세계화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2000년대의 구조개혁을 기점으로 두 패러다임 사이의 갈등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⁵² 이러한 양상은 최근의 한태평양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상이한 선호로도 연장되고 있다.⁵³ 또한 중일 영토 분쟁에 대한 대응책의 수준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의 시장 행위자를 위한 관리된 대응의 선호와 신보수주의의 국가 권위의 원칙적 관점에서의 대응의 선호로 차별화되고 있다.

일본사회의 생활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과 부정적인 관계에 존재한다. 신자유주의의 경쟁의 시장원칙의 보편적 적용은 생활보수주의의 토대가 되어온 국가에 의해 제공되어 온 혜택과 보호와 반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정치 기획이 실천된 구조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한편 공동체로의 내향적 성격을 지니는 생활보수주의는 신보수주의의 전통적 가치 보호에 대한 세계관과 합치되는 성격이 있다. 하지만 내향적 성격을 지니는 생활보수주의가 배타적 대결주의적 대외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전통적 가치의 보호와 대결주의적 대외관의 두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에 대해, 생활보수주의가 수용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 공동체 가치에 대한 높은 존중이

51 渡辺治, 『安倍政権論』, 51~86쪽.

52 中野剛志, 『反動世代—日本の政治を取り戻す』, 講談社, 2013.

53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TPP 가입 찬성의 입장은 石川幸一 外, 『TPPと日本の決断: 「決められない政治」からの脱却』, 文眞堂, 2013을 참조. 신보수주의적 관점에서 TPP 가입 반대의 입장은 中野剛志, 『TPP亡國論』, 集英社, 2011을 참조.

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생활보수주의의 선택이 자신의 선호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선택으로 발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반대하고 신보수주의의 대결주의적 대외관에 대해 그다지 찬동하지 않지만, 그러한 정치적 기획이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장에서 등장했을 때 그러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명확한 찬반의 입장 속에서 정치적 기획물의 진전을 제어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정치적 선택을 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생활보수주의가 확고한 이념지향성과 정책적 노선을 지니지 않고, 생활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심리와 그 기대를 실현해 줄 것 같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정서주의적 지지심리의 감각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사회의 저변에서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의 대결주의적 대외관이 널리 수용되어서 그러한 정치 기획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생활보수주의의 감각 속에 일본사회가 국한된 공동체의 세계 속에 응집되어 있으면서, 거시적 정치 이슈에 대해 제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적 정치 기획들이 보다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보수화는 일본사회 전체의 보수화라고 볼 수 없다. 일본사회는 보수적 정치 패러다임들이 제어되지 않고 정치무대에서 보다 활동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티켓을 그러한 패러다임 설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부여한 적이 없다. 하지만 장기불황과 구조개혁 속에서 내향화된 현실안주적 성격을 강화한 일본사회는 그러한 보수적 정치 기획들의 현실화를 제어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의지도 역량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6. 결론

지난 20여 년간의 장기불황은 일본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전후체제의 구조적 조건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가 개입

속의 경제 발전과 사회보호 모두를 달성하는 것이 곤란해진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불안감이 즉각적으로 팽창주의적이고 대결주의적 성향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인 동시에 비논리적 인과관계의 구성이다. 이러한 획일적 논리구조는 일본사회가 기본적으로 팽창주의적이고 대결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전후체제 속에서 잠복되어 있던 그러한 성향이 상황만 맞으면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가정은 일본사회에 대한 경직된 문화결정론적 해석이다. 보다 논리적 인과관계를 찾기 위한 방법은 전후체제의 제도 속에서 일본사회가 어떻게 구조화되었으며, 그러한 일본사회의 전후체제 속의 성격이 구조변동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논문은 일본의 전후체제의 고용구조와 재분배구조 속에서 일본사회가 소단위로 나뉘어 보호되고 혜택을 받아 포섭되어 왔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선별주의적 포섭의 메커니즘이 일본사회의 미시적 이슈에로의 몰두와 좁은 단위 내로의 공공성 인식의 성격을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후체제에 의한 제도적 유산으로서의 성격을 바탕으로 일본사회는 장기불황의 구조변동에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이슈의 미시화와 폐쇄적 성향의 공공성 인식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불황의 구조변동에 대한 일본사회의 주류적 대응은 내향적 생활보수주의로의 소극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향적 생활보수주의의 감각이 일본사회 내 차별과 배제의 소수의 주장과 대결주의적 대외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기획에 대해서 특별한 찬반의 입장을 표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보수주의는 대결주의적 대외관의 성격을 지니는 신보수주의에 대해 소극적 지지라기보다는 방기에 가까운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기가 전략적 선택이 아닌, 공동체 보호를 위한 정성이 갖든 노력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의 복잡성이 존재한다. 생활보수주의의 이러한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매몰되지 않는 보편적 공공성의 재구축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공공성을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정치이슈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정치 재구축의 작업과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특집 | 현대 일본의 보수 그리고 우익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 박철희

투고일자: 2013. 12. 23 | 심사완료일자: 2014. 1. 3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일본 아베 내각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의 '총체적인 보수화'를 우려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우경화,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의 논조가 아베 내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역으로, 일본의 지식인들은 우경화라는 말에 거부감을 보인다. 일본 내에 양심적인 세력이 많다고 호소한다. 한국의 언론에서 논하듯 일본 정치 세력과 사회 전체가 우익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 지식인들의 변명처럼 일본이 원천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현실적이지 않다. 적어도 2012년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래 강화되고 있는 보수화의 움직임과 증상들은 예전의 일본과 다르다.

이 논문은 일본이 삼중의 의미에서 보수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정당 간 역학의 측면에서 혁신 정당은 약화되고 보수 정당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보수와 혁신의 대결이라는 구도는 희석되고, 보수와 보수 내지 보수와 우익의 대결로 집약되는 정치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정당 내부의 역학 측면에서도 집권 여당과 주요 정당 내에서 혁신적이고 리버럴한 당내 집단은 약화되고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일본 정계 내에서 활동적인 의원 연맹 중에서도 리버럴한 모임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보수적이거나 우익적인 성향의 의원 연맹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가 분절화되고 내부적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 복수의 핵심 인물들에 의한 복수의 조직 구축이 나타나고 있으며, 초당적인 성격을 갖추어가고 있다.

주제어: 보수화, 보수리버럴, 보수우파, 중도보수

장기불황, 구조개혁, 생활보수주의 | 이정환

투고일자: 2013. 11. 17 | 심사완료일자: 2013. 12. 5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지난 20여 년간의 장기불황은 일본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전후체제의 구조적 조건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가 개입 속의 경제 발전과 사회보호 모두를 달성하는 것이 곤란해진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 전후체제의 고용구조와 재분배구조 속에서 선별주의적 포섭 메커니즘이 일본사회의 미시적 이슈로의 몰두와 좁은 단위 내로의 공공성 인식의 성격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후체제에 의한 제도적 유산으로서의 성격을 바탕으로 일본사회는 장기불황의 구조 변동에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치 이슈의 미시화와 폐쇄적 성향

의 공공성 인식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불황의 구조 변동에 대한 일본사회의 주류적 대응은 내향적 생활보수주의로의 소극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향적 생활보수주의의 감각이 일본사회 내 차별과 배제의 소수의 주장과 대결주의적 대외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기획에 대해서 특별한 찬반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장기불황, 구조개혁, 생활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넷우익과 반한류, 배외주의의 여론: 주요 언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 황성빈

투고일자: 2014. 1. 7 | 심사완료일자: 2014. 1. 9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글의 목적은 일본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내셔널리즘, 배외주의의 확산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먼저 ‘넷우익’의 현상에 대한 선행 논의를 살펴본 후 일본의 주요 언론이 이 현상 또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했다. 주요 언론이 여전히 여론 공간 형성에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인터넷상의 여론이 기존의 여론 공간과 독립적으로 출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 하에 그 입장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시각에서였다. 분석 결과, 리버럴, 보수 신문 모두 넷우익의 출현과 배외주의 확산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버럴(『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과 보수(『요미우리신문』) 사이에는 양적인 추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시각에서 차이는 없었다. ‘넷우익’의 동향에 대한 주요 언론의 시각은 『아사히신문』이 ‘변명적, 동정적, 위선적’(apologetic, condescending, hypocritical)이라면, 『요미우리신문』은 ‘은폐 감추기’(concealing), 『산케이신문』은 ‘암묵적 심정적 지지’(tacitly sympathetic support)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오히려 현실적 보수(『요미우리신문』)와 심정적 보수(『산케이신문』)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주요 언론의 무관심과 외면은 ‘넷우익’의 승인 욕구를 더 자극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넷우익’은 기존 언론의 주변 국가, 특히 한국과 중국과의 역사인식 문제 등에 대한 선정주의적, 신보수주의적 심정에 충실한 보도가 낡은 논리적 껍질이기도 하다.

주제어: 넷우익, 반한류, 배외주의, 여론, 일본

아베 신조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와 ‘국가’: 미시마 유키오의 렌즈를 통해 본 전후 보수주의 미학 | 남상욱

투고일자: 2013. 12. 2 | 심사완료일자: 2013. 12. 13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글은 아베 신조의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를, 미시마 유키오의 정치 미학(political esthetics)과의 대비를 통해서 검토함으로써, 최근 일본의 보수주의 속의 미적 감각의 문제성을 드러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아베 신조의 ‘탈전후 레짐’이라는 정치적 이념은 그의 조부 기시 노부스케의 그것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답습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아베가 돈이라는 가치적인 가치로서 환산할 수 없는 애국심을 ‘미’로 간주하는 행위를 통해 전후 일본 정치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정치에 미를 도입함으로써, 기시의 생활만을 증시하는 ‘기술적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려는 점을 문제화한다. 아베의 행위가 전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급진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지만, 전후 일본에서 정치 미학의 필요성을 외쳤던 미시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매우 보수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전물자들에게 미를 부여해 공동체 속에 그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은 전전의 천황만이 갖는 중요한 정치적 기능이었는데, 아베는 이러한 천황의 정치적 기능을 부활하기는커녕, 천황을 생의 안전을 기원하는 존재로

Conservatives and Right-wings in Contemporary Japan

Three-Layered Structure of Japan's Conservative Political Shift

| PARK Cheol Hee

This article claims that Japanese politics reveals more conservative shift than before in three senses. First of all, in the domain of inter-party competition, liberal or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are on the wane while conservative political parties turned more resilient. The advent of Japan Restoration Party attests the case. Second, in the intra-party space, conservative liberals or moderate conservatives have been either divided or weakened while conservative hawks are on the rise. Even within the DPJ, a major opposition party, conservative politicians stand out while progressives have lost their seats. Third, if we analyze Diet members' study groups after the mid-1990s, a number of conservative hawks' meetings have been constantly increasing with bipartisan membership.

• **Keywords:** conservative shift, liberal conservatism, right-wing conservatism, centrist conservatism

Long-Term Recession, Structural Reform, and Livelihood Conservatism

| LEE Jung Hwan

Japan has fallen into the pit of long-term recession for almost two decades, which has dismantled its postwar system of social integrity and political stability. During this period, the system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protection under the state intervention has stopped functioning.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ivelihood conservatism, which intensified the inward-oriented nature of political and public spheres, has emerged and been strengthened in Japan because of the long-term recession and structural reforms. The livelihood conservatism, the most prominent response to economic hardship in contemporary Japan, is originated in institutional legacies of postwar political economic system. Rather than voicing exclusive opinions to others, the livelihood conservatism has a tendency to concentrate on introvert issues. However, the livelihood conservatism cannot play the role as the countervailing forces against neo-conservatism or neo-liberalism in contemporary Japan.

• **Keywords:** Long-term Recession, Structural Reform, Livelihood Conservatism, Neo-Liberalism, Neo-Conservatism